

1인 가구 사회적고립 위험군 발굴 지원

전주시,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사업 공모 선정 국·도비 3억1200만원 확보... 사회적 안전망 구축 총력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고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전주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키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들이 고립가수로 고착화되는 사회적 약순환고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1인 가구는 2017년 7만1373명으로 전체 가구수 대비 29%에서 2020년 8만9038명 32%로 최근 3년간 1만5300명, 3%가 증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독사 대응체계를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 계층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국·도비 3억1200만 원을 포함한 3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과 상담, 고립 위험가구 지원 시범사업 등 생활지원 중심형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시는 전주시복지재단인 '전주사랑'을 통해 사회적고립 위험이 높은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시원과 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1

인 가구 △고독사 발굴추진단이 발굴한 사회적 고립위험에 놓인 저소득 1인 가구 △입원으로 인한 긴급 간병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악순환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주시금융상담소의 각종 사업을 활용해 성인이 되기 전 금융사기 등 채무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의 빚을 떠안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부실채권 소각을 지원해 채무로 인해 고립가구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사회의 복지관들과 연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가족부양 부담을 떠안아 빈곤의 악

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을 위해 가사도우미와 심리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장기간 사회적 고립을 겪어온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 반려식물을 활용한 정기적 자조모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정서지지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존 고독사 예방관련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위주로 추진됐으나 점차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우리 사회 전반에 숨어있는 고독사의 위험을 줄여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페미니즘예술제-지구탈출'

성평등전주, 19-29일 서노송예술촌서 개최

성매매집결지인 서노송예술촌(선미촌)에서 여성인권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변신한 페미니즘예술제가 열린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서노송예술촌에서 '2022 제3회 전주 페미니즘예술제-지구탈출'을 개최한다.

제3회 페미니즘예술제 '지구탈출'은 '성 착취 현장이었던 곳에서 성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를 기획 의도로, 유리천장 같은 구조적 차별이 사라지는 새로운 행성을 꿈꾸며 페미니스트가 꿈꾸는 이야기들을 구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예술제의 개막식은 오는 19일 선미촌 시티가든 기억공간에서 싱어송라이터인 이상한계절과 송은재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특히 예술제는 선미촌 내 시티가든 기억공간과 과거 성매매업소였던 건물(물왕말2길 3-4, 2층)에서 열려 옛 성매매집결지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예술제에서는 △푸른별 은하수(고나영 작가) △땀기_그연대의 힘(고보연 작가) △삼의 담위성을 찾는 여정을 담아서(김도아 작가) △205, 상상의 내러티브(김미소 작가) △그냥 나 그냥 우리(김지애 작가) △마음의 표상(김채연 작가) △안개와 별,



필터뷰(원내래 작가) △고양이 무덤 외(이민주 작가) △페미니즘 유토피아(이충열 작가) △몽환극(정희정 작가) 등 총 10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22 예술인거점지원사업으로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와 함께하고 있는 송윤·신여량·이뿌리·정유진·최산하 등 5명의 작가가 '공간 기억속 부단한 실패'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선미촌 내 시티가든 기억공간에서 전시도 연다.

예술제 기간 중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이틀간 '선미촌 여행길 플리마켓'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선미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시민주도 태양광발전소' 추가 설치

시민햇빛발전소 6-8호 설치 추진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민햇빛발전소가 확대된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시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완산체련공원주차장 등 3개소에 총 4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주도 설치된 1~5호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65만9275kwh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월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57가구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6호 발전소는 완산체련공원주차장에 설비용량 100kw급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연간 13만5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7호 발전소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설비용량 200kw급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시는 현재 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부지사용 및 공사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8호 발전소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설비용량 100kw급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햇빛발전소는 전주시민 320명이 출자해 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현하고자 조직된 협동조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얻은 이익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 채투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시민햇빛발전소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유휴부지 외에도 민간부문 유휴부지도 적극 발굴

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이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용자에 대한 2%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를 받았을 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용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2%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태양광 796kw(263개소) △태양열 102㎡(10개소) △지열 157kw(9개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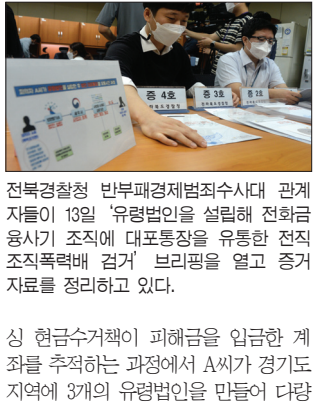
유령법인 세워 대표통장 59개 개설... 수익 챙긴 전직 조폭 구속

유령법인을 설립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대표통장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전직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동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59개 법인계좌를 개설,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 범죄 조직에 넘겨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붙잡은 보이스피



의 대표통장을 만든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유령법인의 경우 자본금 납입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자본금을 일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돈을 출금하는 '가상납입' 수법으로 2019년 4·6월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농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개설한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은 지난해 4월까지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범죄 수익금이 불법자금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대표통장을 만들어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범죄에 쓰일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A씨가 대표통장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폭력조직원들이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표통장을 추적해서 실제 사용한 사람은 누군지, 배후세력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

전주시민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 확대

전주시가 모든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35개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전주시 전역을 순회하며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민법 징계권 폐지(아동제발금지) △아동학대 유형 △의심징후 및 신고방법 등으로, 아동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 범죄를 이웃의 '착한 관심'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한 각 동별로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자생단체회원들과 함께 동네 변화가로 자리를 옮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교직원과 학원강사를 대상으로 학대사례 위주의 실용성 있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밀접 직업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장기결석 아동과 이동수당 미신청 아동 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빅데이터(44종)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방문조사 실시 및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밀접직업군과는 달리 관련 정보나 지식을 얻기 어려운 일반시민들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